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국세청, 2022. 4

## 조세지원 개요

###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써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17.12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금 감면은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두는 유해 조세제도"라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18.12.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3 외국인 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상의 정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외국인(외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다음의 국제협력기구를 말합니다.

-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 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거나, 또는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국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나. 외국인투자(외국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외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국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 등의 일부 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금액 또는 지분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로 봅니다.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아래와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③ 외국투자가
-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3)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
  - 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작성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 4)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촉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
  - ①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다. 외국인투자가(외촉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투자자가라 함은 외촉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 라. 외국인투자기업(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 마. 출자목적물(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출자목적물이란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2) 자본재
- 3) 외촉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



### 용에 관한 권리

-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재산
- 6) 위 나. 2)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7) 다음의 주식
  -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②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8) 국내에 있는 부동산
- 9) 외촉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바. 자본재(외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등의 신고시 해당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1

##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

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②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78의3으로 이관)
- ③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①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제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약>**

조특법 § 121조2①②, 조특령 § 116의2①~⑦⑨⑩⑬⑰⑱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사업</li> </ul>	<p>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미화 2백만불 이상)</p>	<p>7년간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5년간 100% 감면</li> <li>- 다음 2년간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 외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li> <li>*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으로 감면</li> </ul>	<p>3천만불 이상 : 제조업 등 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 수련시설 등 1천만불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항만시설 운영업 등 2백만불 이상 : 연구시설 3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li> <li>*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li> <li>◦ (2호의8)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li> <li>*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li> </ul>	<p>1천만불 이상 : 제조업,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시설,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등 5백만불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의료기관 1백만불 이상 : 연구개발</p>	<p>5년간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3년간 100% 감면</li> <li>- 다음 2년간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li> <li>*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의3</li> <li>◦ (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li> <li>*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①</li> <li>◦ (2호의9)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li> <li>*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li> </ul>	<p>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li> <li>*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2</li> </ul>	<p>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 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p>	



◦ (2호의5) 외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5백만불 이상	
◦ (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제조업 등 : 1천만불 이상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5백만불 이상 연구개발업 : 2백만불 이상	
◦ (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①2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①5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복합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	

## 2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합니다.

### 가.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미화 2백만불 이상 투자)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구 분	분 야
1.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전기 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착용형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OLED), 3D프린팅, AR 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 UHD(Ultra-High Definition)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바이오 화학
8. 에너지산업·환경	ESS(Energy Storage System),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구리합금, 몰리브덴, 특수강, 기능성탄성·접착 소재,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동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지역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새만금위원회)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의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 「공항시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공



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 ④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신성장동력·원천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 ⑤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 상기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축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특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
  -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 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 다.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안에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호텔업 및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④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2006.2.9.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⑤ 조특법 제121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 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일 것
- ㉕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 ⑥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㉖ 엔지니어링사업
  - ㉗ 전기통신업
  - 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㉙ 정보서비스업
  - ㉚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㉛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 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㉝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마.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 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아래의 ②연구개발업은 2백만불 이상, ③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 ① 제조업
- ② 연구개발업
- ③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④ 조특법시행령 제5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⑤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 ② 외국인투자비용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 3 법인세의 감면방법

####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감면대상사업소득	산출세액	감 면
		가 산 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 나. 감면기간

#####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121의2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1호)</li> <li>○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2호)</li> </ul>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2호의2)</li> <li>◦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호의3)</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호의4)</li> <li>◦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2호의5)</li> <li>◦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2호의6)</li> <li>◦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사업(2호의7)</li> <li>◦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2호의 8, 9)</li> <li>◦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3호)</li> </ul>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

##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축소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 중인 기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제12항)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50%감면, 다음 2년간은 30%감면

## 3) 감면기산일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이때,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합니다.

## 4)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과 관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특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합니다.

## 다.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조세감면신청기한(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① 신규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② 변경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조특법 제121조의2 제10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 전 또는 증자신고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조특법 제121조의2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신청,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전확인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감면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증자분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1조의4를 적용합니다.

1) 조세감면의 신청 및 결정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당초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



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을 면제합니다. (2006.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 3) 감면의 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전입됨으로써 당해 외국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중 새로이 취득·설치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전에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증자를 통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 ②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4) 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 정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 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2))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5조 제2항 제1호)
-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 ① 외국법인 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 상기 "㉠", "㉡"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 ㉣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직·간접으로 소



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  
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투자자에  
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액(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2호)

- ③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  
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조세면제>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절 차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주 등의 투자로 인해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함(외촉법 제21조제1항)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 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기 본 요 건	<외촉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투자금액 요건 : 1억원 이상투자비율 요 건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 른 외국인투자
출 자 목적물	출자목적물 :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1.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등) 또는 이 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원화) 2. 자본재 3.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5. 국내지점 폐쇄 또는 내국법인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6.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7. 주식 8. 국내소재 부동산 9. 기타 내국지급수단	<조세감면배제>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아래의 경우조 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 된 외국 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투 자 유 형	외국인투자자 위의 출자목적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음 (외촉법 제5조부터 8조의2까지)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5.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아래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제11항) 1.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우회 투자한 경우 그 소유지분 상당액 3.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 4.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



## 사. 감면세액의 계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조특령 제116조의2 제14항)

$$\begin{aligned} \text{○ 감면세액} &= \left(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 \text{○ 감면비율} &= \frac{\text{외국투자자가자본금}}{\text{총자본금}}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end{aligned}$$

### 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아래 ①의 금액에 ③의 금액 중 ②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령 § 116의2⑧, 조특칙 § 51)

- ①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 ②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 수입액의 합계액
- ③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 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 자.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7%(과세표준이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부분은 12%, 과세표준이 1백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조특법 § 132)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이러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야 합니다.

### 차. 중복지원의 배제

####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제3항)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④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⑦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4)
- 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5)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복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공제세액} = \text{공제할 투자세액} \times \frac{\text{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text{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조의2)
-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법 제31조 제4, 5항)
-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제4항)
- 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2조 제4항)
- ⑦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제1항)
- ⑧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 6 제1, 2항)
-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 9 제2항)
-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 11)
-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항)
- 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 ⑮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

의9 제2항)

- 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17 제2항)
-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0 제2항)
- 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1 제2항)
-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2 제2항)

### 3) 지방세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에 따른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카.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1) 감가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타. 구분경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6항과 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143조)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



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규칙 § 75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 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②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③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

## 파.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⑭)

-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나.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 (한도)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 2018.1.1.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배제 외국인투자는 제외)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금액기준 한도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고용기준한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 하.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 상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 포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 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세액 등을 계산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① 3)

### 4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가.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2)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 5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조특법 제121조의3)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2호의5·제2호의8·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3제1항 각어느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 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 ①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② 해당 자본재가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③ 외촉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라. 면제제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 제4항)